

ISSN 2734-0317

www.kita.net

KITA

통상 리포트

2024

VOL.13

폰 데어 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 심화되는 美 · 中 경쟁 속 생존 전략

한아름 수석연구원

KITA 통상리포트 2024 VOL.13

폰 데어 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 심화되는 美 · 中 경쟁 속 생존 전략

발행인 윤진식

편집인 조상현

발행처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발행일 2024년 12월 18일

폰 데이터 라이언 집권 2기 EU 통상정책 : 심화되는 美·中 경쟁 속 생존 전략

Contents

요약

01. 폰 데이터 라이언 2기 EU 통상정책 방향	1
02. 폰 데이터 라이언 2기 EU 통상정책 핵심 키워드	10
03. 전망 및 시사점	25

한아름 수석연구원 (02-6000-5850, ariel.han@kita.or.kr)

※ 본 리포트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2기 EU 집행위원회가 2024년 12월 1일 공식 출범했다. 폰 데어 라이엔 1기 집행위원회는 그린딜(Green Deal),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같이 환경·인권 등 ‘가치(value)’에 기반한 다수의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왔다. 반면 폰 데어 라이엔 2기는 ▲EU 경제 위축 및 정치적 동력 약화, ▲중국발 공급과잉 및 美·中 대비 산업 경쟁력 약화, ▲차기 美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의 ‘삼중고’에 맞서 산업 경쟁력 및 경제안보 정책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EU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폰 데어 라이엔 2기 집행위의 정책은 ①친환경 투자 확대로 EU 산업 경쟁력 견인, ②美, 中에 버금가는 대규모 투자, ③기업 발목 잡는 과도한 규제 완화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친환경 기술·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후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그린딜은 산업경쟁력에 방점을 둔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로 전환된다. 그 과정에서 EU 역내 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조달에서 역내산 제품 조달을 확대할 방침이며, 공급 측면의 투자뿐만 아니라 수요를 동시에 창출하기 위해 자동차 등 업계에 친환경 철강 사용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美·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마리오 드라기 前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연간 8천억 유로 수준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고,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시장연합 구축 등 방안은 집행위원회 정책 의제에도 반영되었다. 기업의 높은 규제 준수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공급망실사지침 등 기존 시행 중인 규제의 보고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다만 이미 제시된 목표나 주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는 삼림벌채금지규정(EUDR) 시행을 1년 연기했으나 기업 실사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은 수용하지 않았고, ‘자동차 CO₂ 배출 규제 규정’에 대해서도 전기 기반 합성연료(e-fuel)는 허용 하되 감축 목표 자체의 개정에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중국의 안보 위협, EU 역내 시장 왜곡으로부터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안보 정책도 더욱 강화된다. ①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②역외보조금규정(FSR), ③수출통제 및 투자제한 조치, ④對EU FDI에 대한 ‘유럽산 사용’ 등 조건 제시가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집행위원회는 이미 중국 공급과잉에 대응해 수입규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美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시 중국산의 EU시장 유입이 늘어날 수 있어, EU의 수입규제 조치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상계관세와 다른 역외보조금규정은 기존 수입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조달, 기업결합 분야에서 특정 제3국 기업을 직접 규제할 수 있고, 집행위원회가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는 등의 이점이 있어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안보 관련 회원국별 상이한 규범과 정책 기준을 조화시키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EU 차원의 수출 통제 및 투자제한 정책 수립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 기업의 EU 역내 그린필드 투자에 대한 장벽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달리 EU는 역내 제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중국의 제조 노하우 획득을 목적으로 중국 기업의 투자에 상대적으로 개방적 기조를 취해왔다. 그러나 저가 중국 브랜드의 시장 잠식과 중국 투자 생산시설의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EU 내부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원회는 EU 역내 산업으로의 낙수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 기업의 투자에 역내산 부품 사용, 기술 이전 등의 조건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화되는 대중국 경제안보 조치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EU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EU의 대중국 무역, 투자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미국과 같은 높은 관세조치나 규제에 나설 가능성은 낮으며, 중국산 수입이나 중국의 對EU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결국 EU 시장에서 한중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반사이익도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한국산 예폭식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사례와 같이 저가 중국산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수입규제 강화로 한국산 제품이 동반 제소되는 등 간접적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의 기후정책 퇴보 가능성에도 EU는 친환경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규제보다는 투자 확대에 접근 하겠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분야 투자 확대 및 규제 완화는 EU에서 대규모 공장 신·증설을 진행 중인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 및 친환경 인프라·기술 분야 기업에게는 기회 요인이다. 다만 미국 주도의 리쇼어링 정책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 투자에 대한 유인책뿐만 아니라 역내 제조업 역량을 보호, 강화하고자 하는 보호주의 조치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조업 투자 시 역내 전후방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친환경 기준을 내세운 역내산 원재료·부품 조달 요건이 도입될 수 있다. 향후 공급망실사지침 등 규제에 따른 보고 의무가 완화될 경우, 대기업 협력 또는 EU 공급망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업에 부과 되는 의무 자체가 축소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은 낮아 지속적인 규제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1 폰 데어 라이엔 2기 EU 통상정책 방향

□ (배경) '24.12.1. 출범한 폰 데어 라이엔 2기 집행위는 산업 경쟁력 및 경제안보 정책 강화를 예고하고 있어, 1기 대비 달라진 통상정책 방향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큰 의제를 미리 점검할 필요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유럽의회의 표결 결과 찬성 401표, 반대 284표, 기권 15표, 무효 7표로 선출되어 연임에 성공('24.7.18.)
- 의회의 신임 투표를 앞두고 폰 데어 라이엔은 EU의 경쟁력 강화, 산업정책 및 경제안보 정책을 역설

1. 폰 데어 라이엔 1기 평가

□ 폰 데어 라이엔 1기는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통상정책 기조 하에 그린딜 및 디지털 전환 정책을 중점 추진

- 다자주의, 규범 중심 통상질서의 회복과 동시에 EU의 이익 보호를 추구하며, 역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인권·환경 보호 등 지속가능한 무역 규범을 정립하는 데 초점
- 코로나19로 EU의 공급망 취약성이 부각됨에 따라 역내 친환경·디지털 공급망 강화 정책과 공급망의 중국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대중국 '더리스크링(de-risking, 위험 제거)' 정책을 확대
- ▲환경·인권 보호, ▲EU 역내 친환경·디지털 공급망 강화, ▲디지털 주권 확보 및 표준 정립,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다수의 입법 진행

〈표1. 폰 데어 라이엔 1기 통상정책 및 주요 입법〉

지속가능 무역	공급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딜(Green Deal)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공급망실사지침(CSDDD) •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통한 친환경 산업 육성 강화 • 탄소중립산업법(NZIA) 및 핵심원자재법(CRMA) • 유럽 반도체법 및 '지속가능 배터리 규칙' •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
디지털 주권 확보 및 표준 정립	공정경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 데이터거버넌스법(DGA) 및 데이터법(Data Act) • AI법(AI Act) • 사이버복원력법(C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외보조금규정(FS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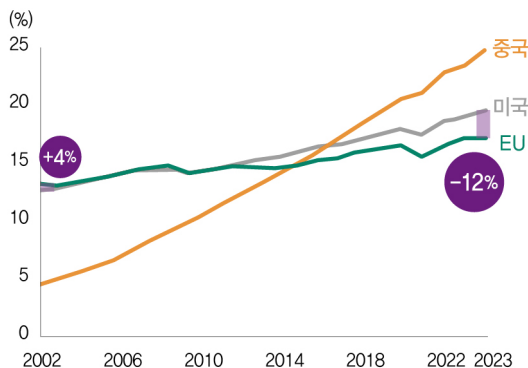
2. 2기 출범 앞둔 ‘삼중고’ 통상환경 : 내부 동력 약화, 대외 경쟁 심화, 트럼프 재집권

(1) EU 경제 위축 및 정치적 동력 약화

□ EU는 생산성 저하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며 경쟁력 위기(competitiveness crisis)에 직면

- EU와 미국 간 GDP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은 미국 대비 EU 생산성의 급격한 약화¹⁾
 - 구매력평가(PPP) 기준 EU GDP는 '02년 당시 미국 GDP보다 4% 높았으나, EU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23년 미국 대비 12% 낮은 수준을 기록²⁾
 - 노동생산성의 척도인 근무시간당 생산량(비농업 기준)이 미국은 '19년 이후 연평균 6% 이상 증가한 반면, EU는 동 기간 연평균 약 1% 증가에 그침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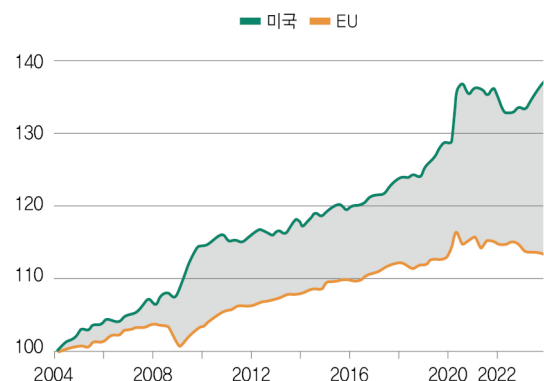
〈그림1. EU·美·中 PPP 기준 GDP 추이〉



자료: Draghi, M.(2024)

주: 2015년 가격 기준

〈그림2. 美-EU 근무시간당 생산량 추이〉



자료: FT(2024)

- ▲에너지 가격 부담 증가, ▲공공 및 민간 투자 부족, ▲과도한 규제, ▲기술 혁신의 부재, ▲회원국 간 정책 통일성 부족 등이 산업 및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꼽힘
 - EU의 산업용 에너지 가격은 '22년 기준 \$242.1로, 미국(\$84.6) 대비 약 3배에 달하며, OECD 평균 (\$162.6) 대비 약 1.5배 수준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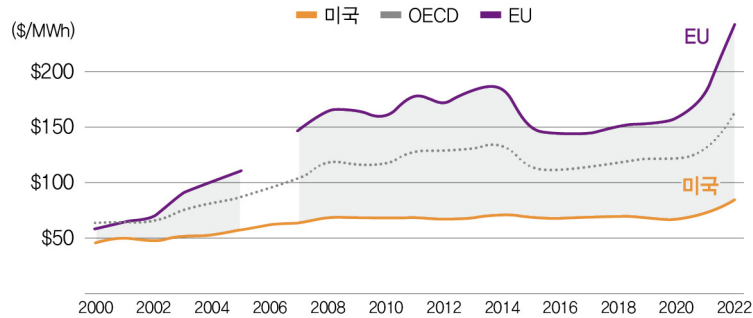
1)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2) Ibid.

3) Delphine Strauss, Sam Fleming and Valentina Romei(2024,3,10.), "Europe faces 'competitiveness crisis' as US widens productivity gap," Financial Times.

4) Martuscelli, Carlo(2024,10,3.), "7 ways the US is beating Europe," Politico.

〈그림3. 美-EU 산업용 에너지 가격 추이〉



자료: Politico(2024)

- 높은 에너지 가격과 물가 상승률로 인해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친환경 정책에 따른 추가적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와 이민정책,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감으로 기존 EU 체제에 대한 불만 확대
- 유럽의회 선거 결과 유럽국민당(EPP)가 다수당을 수성했으나 중도연정 및 녹색당 등 진보 그룹이 약화되고 극우 정치그룹이 약진

〈표2. 제10대 유럽의회(2024~2029) 의석수〉

구분	정당	의석	변화	비율
중도 연정 (Coalition)	유럽국민당(EPP)	188	+12	26.1
	사회주의진보동맹(S&D)	136	-3	18.9
	유럽을 새롭게(Renew Europe)	77	-25	10.7
	소계	401	-16	55.7
극우	유럽보수개혁당(ECR)	78	+9	10.8
	유럽을위한애국자들(PfE)	84	+60	11.7
	주권국가유럽(ESN)	25		3.5
	소계	187	+69	26.0
기타	녹색당(Greens)	53	-18	7.4
	더 레프트(The Left)	46	+9	6.4
	무소속(NI) 및 신규	33	-29	4.6
	소계	132	-38	18.3
총계		720	+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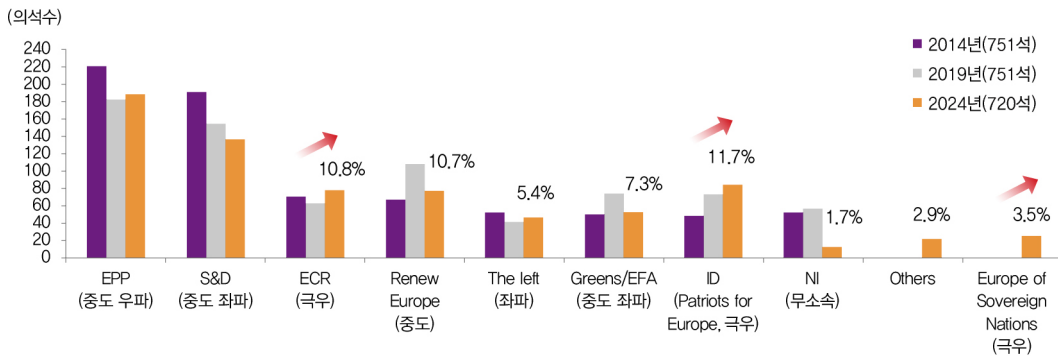
→ 유럽의회 내 **극우, 강경우파 정당** 비중 및 영향력 크게 확대→ **반이민, 반친환경** 정책 요구→ '19년 선거에서 녹색당 약진은 이후 5년간 EU의 **친환경 정책 추진 동력**→ 최근 기후정책에 대한 **유권자 관심 감소**가 의석수 대폭 축소 원인

자료: European Parliament (2024)

주: 7월 23일 기준. 유럽의회 선거 이후 정치그룹 재편에 따라 정당 및 의석수 변화

- 유럽의회 내 극우 및 강경 우파 정당의 비중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중도 연정(coalition)이 축소되어 새로운 입법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환경 규제에 대한 회의론이 커짐
 - 법안 제출 권한이 없는 유럽의회는 법률안을 직접 제출할 권한은 없으나 집행위가 제출한 법안에 수정 의견을 제시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며, 예산 심의권을 가짐
- 특히 프랑스, 독일은 유럽의회 선거 결과 집권 여당이나 연정 참여 정당들이 지지를 잃어 조기 총선, 연정 해체 등 국정 운영이 불안정해진 상황으로 EU의 정책 추진 동력에도 영향이 불가피

〈그림4. 유럽의회 그룹별 의석수 변화(2014~2024년)〉



자료: European Parliament(2024)

(2) 美·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EU

□ 미국, 중국에 뒤처지는 산업정책 동력

-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산업보조금을 통해 '22년 기준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의 30.2%를 차지⁵⁾했으며, 美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통해 투자 유치
- EU는 역내 전략산업 육성 및 생산시설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그린딜 산업계획, 반도체법 등을 추진하고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여전히 美·中 대비 규모, 속도 면에서 열위
 - EU의 외국인직접투자(FDI)은 '22년 848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으며, '23년 586억 달러 순유입 수준을 회복했으나, '19년(6,273억 달러) 대비 약 10% 수준이며 미국 대비 18.9% 수준에 불과⁶⁾

5) World Bank

6) UNCTAD

- 마리오 Драги 前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EU의 재정지원이 여러 프로그램에 분산되어 있어 복잡하고 소요기간이 길며, EU의 탄소중립산업법은 IRA와 달리 명시적인 역내산 사용 요건이 없어 산업 육성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⁷⁾

〈표3. 미국, EU, 중국 산업정책 현황〉

분야	미국	EU	중국
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플레이션감축법(IRA) : 친환경 산업 보조금 및 세액 공제 '30년까지 총 3,690억 달러 투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딜 산업계획 : 코로나19 회복 및 복원기금 등 총 6,820억 유로의 자금 조달 계획이나 대부분 민간조달 자금이거나 보조금 아닌 대출에 활용됨⁸⁾ 탄소중립산업법 : 재원으로 유럽주권기금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회원국의 지지 부진으로 대폭 축소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은 '23년 친환경 기술 제조업에 대한 전 세계 투자의 3/4을 차지¹⁰⁾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과학법 : 보조금, 세액공제, 정부지출 등 약 2,800억 달러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법 : '30년까지 144.5억 유로의 재원을 조달하고, 공공·민간을 합쳐 총 430억 유로 투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자립을 위해 3,440억 위안 (487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빅펀드 3기 출범

□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EU 역내 제조 경쟁력 급격히 약화

- 중국산 저가 제품이 역내에 대량으로 유입되어 가격이 급락하고 EU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에 따라 역내 대형 제조업체들이 파산하거나 역내 생산시설을 폐쇄해 일자리가 감소

〈표4.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른 EU 철강·태양광 산업 영향〉

영향	세부내용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년 EU의 조강 생산량은 역대 최저 수준인 1억 2,600만 톤으로, '08년 대비 30% 감소했으며 지난 10년 평균(1억 5,000만 톤) 대비해서도 약 16.0% 낮음¹¹⁾ '20년 이후 EU 역내 철강산업 인력의 1/4 수준인 23,000개의 일자리 감소¹²⁾ 역대 최저 수준의 수요 및 생산량 감소, 인력 감원, 생산시설 폐쇄로 현재 유럽 전역에서 약 3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와 260만 개의 간접 일자리가 위협에 처함¹³⁾
태양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中 공급과잉으로 '23.4월~'24.4월 1년간 태양광 패널 가격 약 50% 하락¹⁴⁾ 유럽 내 약 1억 4,000만~1억 7,000만 개 태양광 모듈 재고 축적(70~85GW 용량) '23년 기준 EU 역내 생산은 전체 수요의 3%에 불과, 수입의 80% 이상 중국 의존¹⁵⁾ Meyer Burger(스위스), Systovi SAS(프랑스), Norwegian Crystals ASA(노르웨이), REC Silicon(노르웨이) 등 대형 태양광 모듈 및 소재 생산업체 파산 또는 역내 공장 폐쇄¹⁶⁾ 유럽 태양광 제조 협의회는 '24.4월 기준 3GW 이상의 태양광 설비가 추가 폐쇄 위협에 처했다고 주장¹⁷⁾

7) Draghi, M.(2024), op.cit.

8) 안중기(2024.4.), “주요국의 전략산업 재정지원 정책 현황,” FIS 재정리포트 24-03, 한국재정정보원.

9) 유럽주권기금은 ‘유럽을 위한 전략적 기술 플랫폼(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으며 EU집행위가 요청한 신규 기금 100억 유로 중 이사회는 15억 유로만 승인. Porciello, Stefano and Matthew Newman(2023.6.22.), Comment: Europe’s answer to US Inflation Reduction Act risks never happening,” MLex; Homan, Zoe (2024.2.1.), “Cuts on new EU funding for strategic technology platform confirmed by European leaders,” MLex.

10) IEA (2024), “Advancing 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 IEA.

(3)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

-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인은 줄곧 對EU 무역적자를 문제 삼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편관세, 상호관세 등 관세조치를 예고
 - 미국의 對EU 상품무역적자는 '24.1~9월 1,735억 달러를 기록해 동기간 전체 상품무역적자의 약 19.4%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¹⁸⁾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자동차 분야를 지적하고, 메르세데스 벤츠 등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를 직접 언급하며 모든 수입차에 일괄 100% 관세를 부과해 생산시설을 미국 내로 유인 하겠다고 주장
 - '23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3.3%, EU의 평균 관세율은 5.0%로 큰 차이가 없으나 승용차에 대한 EU의 관세는 10%로 미국 관세(2.5%)의 4배 수준이며, 농산물 관세도 11.3%로 미국(4.8%) 대비 높음¹⁹⁾
 - 美-EU가 논의해온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²⁰⁾의 협상 시한인 '25.3월까지 합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중단되었던 EU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232조 관세조치나 EU의 보복관세 조치가 재개될 수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조치와 함께 미국 내 제조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등 리쇼어링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경우 EU 역내 제조업 투자는 더 악화될 수 있음

11) Eurofer(2024.9.5.), "European steel industry and manufacturing at existential risk: radical Clean Industrial Deal last train for stronger and greener EU, warns EUROFER".

12) Ibid.

13) industriAll and Eurofer, "A EUROPEAN STEEL ACTION PLAN".

14) KAWANO, MAO(2024.6.1.), "China solar panel glut squeezes European suppliers as prices plunge," Nikkei Asia.

15) Ibid.

16) Naschert, Camilla(2024.4.15.), "Squeeze on European solar manufacturers curbs innovation, cementing China's lead," S&P Global.

17) Ibid.

18)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4.11.5.), "U.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September 2024".

19) Palmer, Doug and Camille Gijss(2024.11.14.), "EU warned to prepare for early Trump tariff action," Politico P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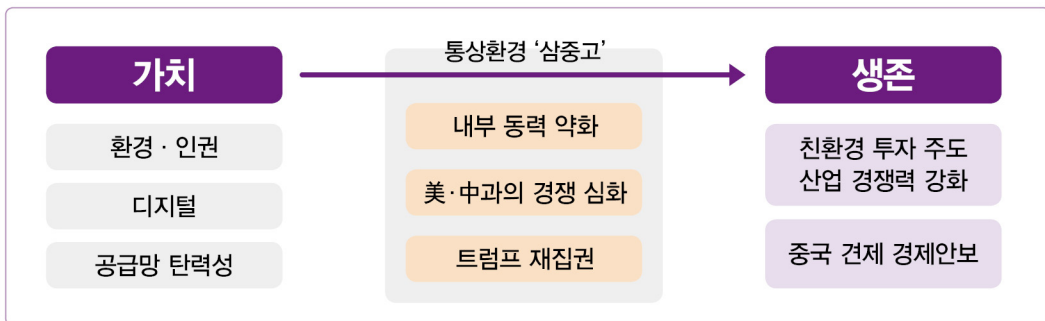
20)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EU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18.3.23.)한 관세를 저율할당관세(TRQ)로 전환하기로 합의('21.10월) 하면서 철강·알루미늄의 높은 탄소집약도 및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당초 '23.10월 타결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으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비시장경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규제 방식 등에 대한 양측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못함

3. 폰 데어 라이엔 2기 통상정책 기조 변화 : 경제안보 및 산업경쟁력 제고

□ 폰 데어 라이엔 2기 집행위는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안보 정책 추진

- 폰 데어 라이엔 1기 집행위는 유럽그린딜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CSDDD) 등 환경·인권 등 '가치(value)'에 기반한 다수의 입법과 정책을 추진
- 폰 데어 라이엔 2기는 EU가 '실존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 속 '생존'(안보)을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경제안보에 방점

〈그림5. 폰 데어 라이엔 2기 통상정책 변화〉



자료: 저자 작성

□ 집행위원단 인선('24.9.17. 발표)은 정책 방향을 반영해 무역보다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경제안보에 초점

- 과거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수석 부집행위원장직을 겸직하는 핵심 요직으로 손꼽혔으나 폰 데어 라이엔 2기에서는 영향력이 축소됨
- 스테판 세주르네 現프랑스 외무장관이 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으로서 통상총국을 관장하게 된 가운데, 프랑스는 EU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적 입장을 내고 있어 향후 개방적 무역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²¹⁾
 - －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청문회에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대한 프랑스의 반대 입장을 옹호하며, 동 협정이 유럽과 농민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언급²²⁾

21) Gijs, Camille(2024.9.17.), "Von der Leyen's Mr. Fix It handed his toughest mission yet," Politico Pro.

22) Faggionato, Giovanna(2024.11.12.), "5 things to know about EU industry chief Stéphane Séjourné's hearing," Politico.



- 마로스 셰프코비치 現그린딜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통상과 경제안보를 함께 담당하며, 이와 관련 EU가 자국 기업 및 핵심기술 보호에 집중하여 수출 증진이나 대외 개방에는 소홀할 것이라는 우려 제기²³⁾

〈그림6. 폰 데어 라이엔 2기 집행위원단 주요 인선〉



자료: 저자 작성

〈표5. 통상 관련 집행위원 정보〉

이름/직책	담당 분야 및 주요 정보
 <p>스테판 세주르네 Stéphane Séjourné 수석 부집행위원장 (프랑스, 신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분야: 경제·산업 변영 및 산업 전략, 단일시장 (Single Market) • 주요 임무: 청정산업딜, 단일시장 전략, 공공조달, 표준, 지적 재산권, 원자재, 철강·금속행동계획 등 • 정당/ 유럽의회 정치그룹: (佛) 르네상스당/ Renew Europe(중도) • 경력: 前 프랑스 외무장관, 前 유럽의회 의원 (Renew Europe 대표) •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마크롱 에마누엘 프랑스 대통령의 정치 고문으로 임명될 정도로 가까운 정치적 우군이나 유럽의회 선거 이후 마크롱 대통령의 입지가 축소되는 가운데 추천되어 차기 집행위 내 입지가 주목됨
 <p>마로스 셰프코비치 Maroš Šefčovič 집행위원 (슬로바키아, 재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분야: 통상, 경제안보 • 주요 임무: 자유공정무역 달성, 교역국과의 통상협상, 경제 안보 강화 • 정당/유럽의회 정치그룹: 사회민주당 SDSS/유럽의회 소속 정치그룹 없음 • 경력: 前 EU 집행위 그린딜 수석 부위원장 및 기관 관계 담당 부위원장 •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부터 집행위원으로 임명되어 브렉시트·금융위기·코로나19 시기에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며 '집행위의 해결사'로 불림 – '23년부터 그린딜 총괄 및 EU 경쟁력 유지를 위해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간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자료: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024), MLex(2024) 참고

23) Faggionato, Giovanna(2024.11.12.), op.cit.

-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셰프코비치 집행위원은 중국 공급과잉과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강경대응 입장을 드러내며, 역내 제조산업 보호 확대 및 무역 방어 도구(Trade Defence Instrument, TDI)²⁴⁾의 적극적 활용을 시사
 -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중국 공급과잉에 대응해 역내 제조업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위한 산업정책 기금 마련 및 공공조달지침 개혁을 강조²⁵⁾
 - 셰프코비치 집행위원은 중국과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제한조치, 역외보조금규정 등 방어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경제안보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채택할 것이라고 언급²⁶⁾

24) EU는 무역방어도구(Trade Defence Instruments, TDI)라는 명칭으로 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조치를 포함하는 무역구제(Trade Remedies) 제도를 운영

25) Faggionato, Giovanna(2024.11.12.), op.cit.

26) Verhelst, Koen and Camille Gijs(2024.11.4.), "5 takeaways from Maroš Šefčovič's trade czar confirmation hearing," Politico.

2 폰 데어 라이엔 2기 EU 통상정책 핵심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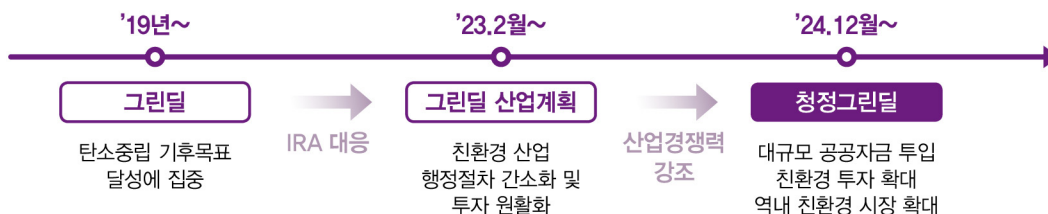
1. 경쟁력 제고

(1) 친환경 투자 확대로 EU 산업경쟁력 견인

□ 기존 ‘그린딜(Green Deal)’은 산업경쟁력에 방점을 둔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로 전환

- 폰 데어 라이엔 2기 임기 개시 후 청정산업딜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산업 탈탄소화 가속법 (Industrial Decarbonization Accelerator Act)’ 입법에 나설 계획
- 친환경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후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의도

〈그림7. 그린딜 발전 추이〉



자료: 저자 작성

〈표6. 청정산업딜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청정산업딜 (Clean Industrial De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에너지 인프라 및 기술 투자 확대를 통한 역내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저렴한 에너지 공급 및 원자재 접근 보장 등 추진 • EU 역내 친환경 기술에 대한 선도시장(lead market) 창출을 위해 친환경 제품 사용 의무화, 공공조달 규정 개정 등 내용 포함 예상
산업 탈탄소화 가속법 (Industrial Decarbonization Accelerator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산업딜의 일환으로 입법 예정 • 신재생에너지, 저탄소기술, 스마트그리드, 탄소포집·운송 등 친환경 인프라 및 기술 투자 촉진 • 기존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와 내용 유사
유럽경쟁력기금 (European Competitiveness F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산업딜의 재원으로 추진 예정 • 친환경산업 뿐 아니라 AI, 우주, 생명공학 등 미래산업을 함께 지원 • 기존 유럽주권기금(European Sovereignty Fund)과 유사

- 공급 측면에서 친환경 인프라·기술 투자로 역내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며, 수요 측면에서는 EU 역내 친환경 기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선도시장(lead market) 조성
 - 친환경 에너지 발전 및 전력 그리드, 인터커넥터, 저장장치 등 인프라에 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자 함²⁷⁾
- (Buy European 기조 강화) 공공조달지침 개정을 통해 EU GDP의 14%를 차지²⁸⁾하는 공공 조달에서 역내산 제품 조달을 확대하여 제조업 보호 수단으로 활용
- 공공조달지침(Public Procurement Directive)을 개정하여 특정 전략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 비(非)가격기준(non-price criteria)을 도입하여 EU 역내산 제품 조달을 확대할 계획
 - 기존 탄소중립산업법도 전략산업의 공공조달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격기준 외 지속가능성 최소 요건 충족 여부 및 복원력을 고려하도록 했으나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
 - 세르주네 산업전략 수석 집행위원장은 공공조달지침 개정 목표가 양질의 일자리 보장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철강, 알루미늄, 화학 산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힘²⁹⁾
- (친환경 철강 구매 요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시장 창출 방안으로 자동차 등 수요업계에 대한 친환경 철강³⁰⁾ 최소 사용 요건 부과 방안 제기
- 유럽의회 국민당그룹(EPP)의 데니스 라트케, 크리스티안 엘러³¹⁾ 의원은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유럽철강협정(European Steel Pact) 입법 제안에서 자동차, 풍력 산업에 대한 친환경 철강 사용 요건 부과 가능성을 언급³²⁾
 - 유럽철강협정 주요 내용은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당초 '26년 종료 예정) 추가 연장,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의 반제품, 완제품 등 다운스트림으로의 적용 확대,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친환경 철강 사용 요건 도입 등
 - 작은 할당량(quota)만으로도 친환경 철강에 대한 수요 확보 및 시장 창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역내 친환경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자동차, 풍력 터빈 등 최종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³³⁾

27) European Commission(2024.11.8.), "Opening remarks by President von der Leyen at the joint press conference with President Michel and Hungarian Prime Minister Orbán following the informal meeting of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of 8 November 2024".

28) Ursula von der Leyen(2024),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2024–2029".

29) Faggionato, Giovanna(2024.11.12.), op.cit.

30) 환경단체인 Transport & Environment는 친환경 철강을 생산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톤당 50kg~400kg인 철강이라고 정의 (일반적인 철강 생산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톤당 1,800kg~2,250kg)

31) 크리스티안 엘러 의원은 지난 임기 동안 국민당그룹 내 산업 및 에너지 정책 조정관을 역임했으며, 탄소중립산업법(NZIA) 협상을 공동 주도하는 등 EU 산업정책에 영향력을 행사

32) Porciello, Stefano(2024.7.23.), "Comment: New EU 'Clean Industrial Deal' proposals are heavy on recycling ... of old ideas," MLex.

- 철강업계는 공공조달 및 산업계에 대한 친환경 철강 구매 요건 도입을 적극 지지하는 반면, 자동차 등 수요업계는 친환경 철강 공급망 미비, 생산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

〈표7. 친환경 철강 최소사용요건 관련 의견 대립〉

(지지) 철강업계, 환경단체	(반대) 자동차 업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철강협회, EU집행위원장에게 친환경 철강 구매 요건 도입 촉구 서한 발송('24.7.12.)³⁴⁾ • 환경단체 T&E(Transport & Environment)는 동 조치의 자동차 제조원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 * '30년까지 40% 의무화할 경우 차량 제조원가 57€ 인상, '40년까지 100% 의무화할 경우 8€ 인상³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철강 공급망 불안정, 자동차 생산비용 증가 등 이유로 반대 입장 • 친환경 철강의 문제는 수요가 아닌 공급 * 현재 EU 역내 고로 생산 철강량 97.5메트릭톤 중 54메트릭톤만 탈탄소화 전환 가능³⁶⁾ • 독일자동차협회(VDA)는 국가별 철강 제조 기술 차이, 정부 보조금 등 영향으로 전환 비용의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고 주장

(2) 美, 中에 버금가는 대규모 투자

- 마리오 Дра기 前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EU 경쟁력 보고서'는 연간 8천억 유로 수준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24.9.9.)

드라기 전 총재는 '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대규모 통화완화 정책으로 유로존 부채위기를 막아 '유로존 구원투수'로 불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EU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공식 의뢰('23.9월)에 따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표하며 차기 집행위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

- (투자규모 확대) 미·중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에너지, 디지털 혁신, 친환경, 방산 등 분야에 최소 연간 7,500억~8,000억 유로 ('23년 EU GDP의 약 4.4~4.7%) 규모의 추가 투자를 제안
- (민간투자 활성화) 국경 간 투자에 대한 과세 등 장벽을 제거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본 시장연합 (Capital Markets Union, CMU)을 구축하고 은행연합(Banking Union)을 통해 은행의 자금 조달 능력 제고
 - 자본시장연합은 '15년에 제안되고 '19년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추진이 더딘 상황³⁷⁾

33) Porciello, Stefano(2024.7.23.), op.cit.

34) Packroff, Jonathan(2024.8.30.), "Steelmakers want von der Leyen to force public authorities, industry to buy green steel," Euractiv.

35) Transport & Environment(2024.7.), "Cleaning up steel in cars: why and how?"

36) Packroff, Jonathan(2024.9.6.), "Car industry pours cold water on von der Leyen's 'lead markets' plans," Euractiv.

- (공공투자 확대) 기존 EU의 다양한 기금 프로그램을 간소화하는 등 예산 구조를 개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 혁신, 친환경 제조 등 민간 분야 전략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해 민간 투자를 지원하고, EU의 보증 규모를 늘려 고위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 EU의 경쟁력, 안보를 강화하는 회원국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금 조달을 위해 회원국 연대보증 공동 채권 발행

□ 자본시장연합 및 유럽저축투자연합 구축 제안은 폰 데어 라이엔 2기 정책 의제에 반영

-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드라기 경쟁력 보고서와 관련하여 유럽저축투자연합(European Savings and Investments Union)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³⁸⁾
-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한 친환경 기술 기업 자금 지원, ▲유럽 공동 프로젝트(IPCEI) 관련 기금 분배 간소화, ▲EU 내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는 1조 2,000억 유로 규모의 통합기금(cohesion fund)을 산업, 디지털화 및 혁신 정책으로 전용하겠다는 계획을 언급³⁹⁾

〈표8. 드라기 경쟁력 보고서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탈탄소화 정책의 경쟁력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탄소화 정책이 친환경 에너지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장기적 성장 위험 • 친환경 기술, 전기차 등 분야에 대한 EU 차원의 산업정책 필요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회원국 공동 조달 확대, ▲신뢰할 수 있고 다각화된 무역 파트너와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친환경 에너지, 원자력의 보상을 화석연료 발전과 분리, ▲에너지 과세 축소 • 탈탄소화에 대한 ▲공공·민간 대규모 투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 CBAM 경과에 따라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대한 ETS 무상할당 폐지 연기 검토
친환경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기술 전용 금융 계획 개발 • 예측 가능 수요 보장 및 타국 무역 왜곡 정책의 상쇄를 위해, 공공조달, CfD 경매 등 물량에 대해 일부 제품 및 부품의 현지 생산 최소 할당량 명시적 도입 •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제3국 투자 및 장기구매계약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적(원자재, 배터리, 운송 및 충전 인프라), 수평적(전기화, 디지털화, 순환경제) 가치사슬 융합을 고려한 산업 로드맵 개발 • CO₂ 배출 규제 관련 기술중립적 접근방식 추구 및 시장, 기술 발전 상황 고려

37) 장영욱 외(2024.8.26.), "2024~29 EU 집행위원회 정책 의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7 No. 31,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38) European Commission(2024.11.8.), op.cit.

39) Faggionato, Giovanna(2024.11.12.), "5 things to know about EU industry chief Stéphane Séjourné's hearing," Politico.

구분		세부 내용
국가·경제안보 강화 및 대외 의존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 경제 강압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기 위해 전략적 자율성 및 경제안보 강화 •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국방지출 증가, ▲무역협정 통한 경제안보 강화, 디리스킹
	핵심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공동 구매 확대, ▲Global Gateway, 핵심원자재클럽 등 활용 자원외교 강화 • 기존 시행 중인 핵심원자재법(CRMA) 외 인허가기간 간소화 위한 추가 조치 • ▲원자재 재활용 단일 시장 구축, ▲대체 소재 개발 R&D 강화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전용 EU 예산 할당, ▲EU 차원의 공동 자금 지원, ▲승인 기간 단축, • ▲팹리스 기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R&D 세액공제 제공, ▲첨단패키징, 소재 등 지원
	방위산업 투자 및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간 분열된 방위산업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확보 필요 • 인센티브 통한 '유럽산 구매(Buy European)' 확대 (현재 해외 조달 금액 비중 80%)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최소 7,500억~8,000억 유로 추가 투자 • 국경 간 투자 장벽 제거를 위한 자본시장연합(CMU) 구축 • EU 예산 구조 개혁 및 공동 프로젝트 지원 위한 회원국 연대보증 공동채권 발행
	규제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법률 채택 전 기존 규제 평가 시행, 정책 분야별 법률 통합 및 간소화 • 신규 입법안에 대한 기업 규제준수 비용 및 행정부담 평가 '경쟁력 테스트' 시행 • 기업 보고의무 25% 경감 (중소기업 최대 50%)

자료: Draghi, M.(2024)

(3) 기업 발목 잡는 과도한 규제 완화

□ 기업의 높은 규제 준수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기업의 보고 의무를 25%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 미국 연방 의회는 제116~118대('19~'24년) 회기 동안 약 3,500개의 법안 및 약 2,000개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반면, 동 기간 EU는 13,000개의 법을 제정⁴⁰⁾
- 유럽 경제단체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 Europe)이 13개 법률을 분석한 결과 169건의 요건이 중복되며, 그 중 29%는 내용 상 차이가 있고 11%는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남⁴¹⁾
- EU집행위는 '유럽의 장기 경쟁력' 전략에 따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중복 요건을 통합하고 디지털화를 확대하는 등 보고 의무 25% 축소 목표를 제시('23.3월)⁴²⁾
- EU 회원국들은 EU집행위가 '25년 상반기에 기업 보고 의무를 25% 경감하는 구체적 방안과 규제에 대한 '경쟁력 영향 평가' 시행 방안을 발표할 것을 요구('24.11.8.)⁴³⁾

40) Draghi, Mario(2024.9.)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Part A: A competitiveness strategy for Europe," European Commission.

41) Ibid.

42) European Commission(2023.3.16.), "Long-term competitiveness of the EU: looking beyond 2030,"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EU집행위는 기존 친환경 규제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완화할 예정

-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특히 기업 부담이 큰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 공급망실사지침(CSDDD), 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상의 보고 의무를 '한 번에(in one step)' 완화하겠다고 밝힘('24.11.8.)⁴⁴⁾
 - 크리스티안 린드너 전 독일 재무부 장관이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도 최대 3년까지 시행 연기를 요구한 만큼⁴⁵⁾ 동 지침의 기업 보고 요건이 가장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
- 각 규정에 따라 당국이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나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고 규정 간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삭제, 통합하겠다고 밝혔으나, 규정의 본래 목표나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⁴⁶⁾

□ 이미 삼림벌채금지규정(EUDR)*은 과도한 기업 부담, 행정절차 준비 미흡 등에 따른 대내외 요구를 받아들여 시행이 1년 연기될 예정이며, 삼자협의 과정에서 기업 실사 의무 완화 방안도 제기

* 동 규정은 가죽, 가구, 타이어, 인쇄 종이 등 삼림 벌채 관련 제품에 대한 기업의 실사체계 구축, 엄격한 원산지 추적 및 삼림 파괴와 무관한 제품에 대한 관련 증빙을 요구

- 당초 '24.12.30. 대기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었으나(중소기업은 '25.6.30.부터), 이행지침 발표 지연, 국별 위험도 평가 미비로 인해 EU 회원국조차 실사 의무 이행에 필요한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우려 제기
- 집행위는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발표('24.10.2.)하였으며, 의회, 이사회와 잠정합의 도달('24.12.3.)
- 삼자협의 과정에서 의회는 국가별 위험 분류에 '무위험(no risk)' 범주를 신설해 기업 실사 의무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24.11.14.)⁴⁷⁾시켰으나 회원국들 반대와 WTO 규칙 위배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철회⁴⁸⁾
 - 기존에는 '낮음(low)', '표준(standard)', '높음(high)'이라는 세 가지 범주만 있었으나 삼림벌채 위험이 무시할 만한(negligible) 수준이거나 존재하지 않는(non-existent) 국가는 '무위험(no risk)'으로 분류하여 해당 국가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사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

43) European Council(2024.11.8.), "Budapest Declaration on the New European Competitiveness Deal".

44) Gros, Marianne(2024.11.25.), "Brussels to slash green laws in bid to save Europe's ailing economy," Politico.

45) Ibid.

46) Ibid.

47) Maria Simon Arboleas and Sofia Sanchez Manzanaro(2024.11.14.), "EUDR: Parliament backs 'no risk' group, trade partners accuse EU of protectionism," Euractiv.

48) 핀란드, 스웨덴 등 EU 회원국을 '무위험' 국가로 분류함으로써 역외 국가에 비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Guillot, Louise(2024.11.29.), "EPP abandons push to weaken anti-deforestation rules," Politico Pro.

-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자동차 CO₂ 배출 규제 규정'의 개정 요구에 대해 집행위는 전기 기반 합성연료(e-fuel)는 허용하되 CO₂ 감축 목표 자체의 개정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
- 동 규정에 반대하는 독일, 이탈리아 등 회원국의 요구를 반영해 집행위는 위임법안을 통한 ▲e-fuel 전용 내연기관차 분류 신설, ▲ 해당 차량의 배출 감축 기여분 산정을 위한 방법론 수립에 합의한 바 있음
 - 의회 선거에서 동 규정 개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유럽국민당(EPP)은 더 나아가 '25년 감축 목표 시행 연기 및 벌금 조치 완화 등 개정을 추가 요구⁴⁹⁾
 - '25년부터 완성차 기업들은 배출량을 '21년 대비 평균 15% 감축해야 하나,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목표 미달성에 따른 수십억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공장 폐쇄 등의 위험에 직면한 업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⁵⁰⁾
 - 청문회에서 기후 담당 집행위원과 교통 담당 집행위원은 '26년 발표될 개정안에 e-fuel 포함 약속을 재확인하였으나 바이오연료는 완전한 무탄소가 아니므로 포함될 수 없다고 언급⁵¹⁾
 - 집행위원들은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기존 감축 목표 완화나 시행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힘⁵²⁾
 - 다만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업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전환 의무화,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전기차 판매를 촉진할 방침⁵³⁾

2. 경제안보

(1)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강화, 간접 영향 주의보

- 집행위는 이미 중국 공급과잉에 대응해 수입규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시 중국산의 EU시장 유입이 늘어나 수입규제 조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 급증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업계 제소 없이 집행위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약 1년간의 조사 끝에 17.4%~35.3%의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24.10.29.)한 것이 대표적

49) Porciello, Stefano(2024.11.21.), "Polluting EU automakers should not be fined next year, center-right EPP set to say," MLex.
50) Ibid.

51) Porciello, Stefano(2024.11.4.), "EU should 'stick to the plan' on CO₂ goals for cars, transport chief candidate says," MLex;
Porciello, Stefano(2024.11.7.), "EEU climate chief backs electric cars, rejects biofuels," M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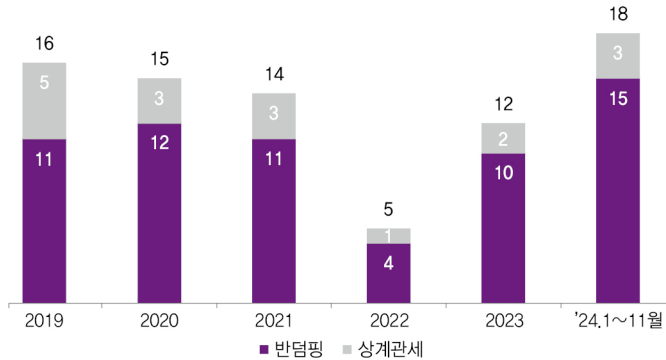
52) Ibid.

53) Ibid.

– 중국이 EU산 브랜드, 돼지고기, 유제품 대상 보복성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독일, 헝가리 등 일부 국가는 EU의 자동차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관세 부과에 반대하였으나 최종 투표 결과 10개국 찬성, 5개국 반대, 12개국 기권으로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

- '24.1~11월 EU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 개시 건수는 총 18건으로 '1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18건 중 15건이 중국 대상

〈그림8. EU의 對세계 수입규제 신규조사 개시 건수 추이〉



자료: European Commission

〈표9. '24년 EU 대세계 수입규제 신규조사 개시 현황〉

	품목	품목명	유형	대상국가	조사개시일
1	철강/금속	용융 알루미늄	반덤핑	중국	2024.11.21.
2	화학	염화폴린	반덤핑	중국	2024.10.31.
3	철강/금속	무두 스크류	반덤핑	중국	2024.10.17.
4	종이/목재	경목 합판	반덤핑	중국	2024.10.11.
5	철강/금속	철강 트랙슈즈	반덤핑	중국	2024.8.23.
6	철강/금속	열연강판	반덤핑	인도, 베트남 등	2024.8.8.
7	화학	글리옥실산	반덤핑	중국	2024.7.25.
8	화학	에폭시 수지	반덤핑	중국, 한국, 대만 등	2024.7.1.
9	종이/목재	포장지	반덤핑	중국	2024.6.14.
10	화학	바닐린	반덤핑	중국	2024.5.24.
11	화학	라이신	반덤핑	중국	2024.5.23.
12	전기전자	광섬유	상계관세	인도	2024.5.17.
13	철강/금속	무게목강관	반덤핑	중국	2024.5.17.
14	종이/목재	다층 원목 바닥재	반덤핑	중국	2024.5.16.
15	철강/금속	석도강판	반덤핑	중국	2024.5.16.
16	전기전자	모바일 엑세스 장비	상계관세	중국	2024.3.27.
17	전기전자	유리섬유 원사	반덤핑	중국	2024.2.16.
18	철강/금속	알루미늄 로드 휠	상계관세	모로코	2024.2.16.

자료: European Commission 참고('24.1.1.~'24.11.27. 기준)

- 에폭시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24.7.1. 개시)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산 제품도 대상으로 하여 강화되는 수입규제 조치가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EU에 앞서 미국이 동일 품목에 대해 개시('24.4.29.)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24.11.12.) 결과 한국은 16.02~24.65%의 덤핑율을 적용받아 잠정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상황
 - 제3국 경유 및 EU 역내 조립·완성을 통한 관세 회피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우회조사도 확대되어, '23년 4건의 신규 우회조사가 개시⁵⁴⁾
- **철강 세이프가드 만료('26.6.30.)를 앞두고 중국발 철강 공급과잉 및 우회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유럽철강협회(Eurofer)와 제조업 노조연맹인 '인더스트리올 유럽(IndustriALL Europe)'은 만료 예정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보다 강력한 관세 체계로 대체하며, 무역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적극 집행할 것을 요구⁵⁵⁾
 - 베르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 포함 60명 이상의 유럽의회 의원들이 스테판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 당시 후보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동 요구안을 지지('24.11.8.)⁵⁶⁾
 -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취임 후 중국 공급과잉 문제에 따른 철강산업 보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언⁵⁷⁾

54) European Commission(2024.9.24.), "42nd Annual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EU's Anti-Dumping, Anti-Subsidy and Safeguard activities and the Use of Trade Defence Instruments by Third Countries targeting the EU in 2023".

55) industriALL and Eurofer, "A EUROPEAN STEEL ACTION PLAN".

56) European Parliament(2024.11.8.), "European Steel Action Plan – Letter for Urgent Action".

57) Spiegelman, Margaret(2024.11.13.), "EU industrial strategy nominee pledges push to protect steel sector," Inside U.S. Trade.

(2) 역외보조금규정(FSR)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적극 대응

□ 폰 데어 라이엔 2기에서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적용 확대 가능성

〈참고1. 역외보조금규정 주요 내용〉

- 동 규정은 공공조달, 기업결합 등 상계관세와 같은 전통적 무역구제 조치로는 대응이 어려운 분야에서 보조금을 통한 경쟁 왜곡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 집행위는 동 규정에 근거하여 ①역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 공공조달에 대한 기업 사전신고를 기반으로, 또는 ②모든 거래에 대해 직권(ex officio)으로 역외국 정부 보조금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부과 가능
 - (시정조치) 보조금 환급, 역내 활동의 일시적 제한, 보조금을 받은 생산 및 연구시설에 대한 접근 허용, 보조금으로 획득한 자산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 연구개발 정보 공개 등

- 동 규정 시행 이후 4건의 심층 조사와 2건의 직권 조사가 개시되었고, 총 6건 중 5건이 중국 기업 대상이며 태양광, 풍력 등 EU 정책 목표에 핵심적인 산업이나 통신, 보안장비 등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
- 상계관세 조사 대비 집행이 빠르고, 집행위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며, EU 역내 진출한 특정 제3국 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이점⁵⁸⁾이 있어 향후 동 규정 적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
 - 특히 중국 보안장비 기업인 뉴크텍(Nuctech)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의 경우 해당 기업의 네덜란드, 폴란드 지사를 새벽에 급습해 압수수색하여 해당 기업이 동 조사 건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며 유럽법원에 제소할 정도로 강도 높게 이루어짐⁵⁹⁾
- UAE 기업에 대한 기업 결합 관련 심층 조사는 FSR 조사가 중국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점차 다른 국가에도 확대될 것임을 시사⁶⁰⁾

58) Alan Beattie(2024.5.9.), "Europe's new anti-subsidy weapon is powerful but hard to control," Financial Times.

59) Foy, Henry et al(2024.4.24.), "EU conducts 'dawn raid' on Chinese security equipment supplier," Financial Times.

60) 법무법인 대륙아주(2024.8.26.), "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 현황, 사례 및 시사점," 법률신문.

〈표10. FSR에 의거한 중국기업 조사 개시 사례〉

	조사개시일	구분	분야	대상기업	조사내용	경과
1	'24.2.16	공공조달	전동열차	중처쓰팡 (중국영기업 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리아 전동열차 공급·유지보수 최소 17.5억 유로 보조금 수령, 경쟁사 대비 절반 수준의 입찰가격 제시 	입찰 참여 철회 ('24.3.26.)
2	'24.4.3.	공공조달	태양광	론지솔라(中)- 에네보(루마니아) 합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 입찰계약 가치보다 높은 보조금 수령, 보조금 성격, 조건 등 정보 미제공 	입찰 참여 철회 ('24.5.13.)
3	'24.4.9.	직권조사	풍력터빈	인비전(中), 밍양(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등 풍력발전단지 확장 사업 관련 조사 중국 정부 보조금으로 유럽산 대비 제품 가격 최대 50% 저렴 	조사 진행 중
4	'24.4.23.	직권조사	보안장비	뉴크텍 (중국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덜란드, 폴란드 지사 급습하여 보조금 관련 데이터 요구 및 대표 심문 해당 기업은 동 조사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유럽법원에 제소 	조사 진행 중
5	'24.6.10.	인수합병	통신	e& (UAE 국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코 통신기업 지분 인수 심층조사 ▲정부 무제한 보증, ▲국영은행 대출 제공 등 보조금 취득 	확약에 따른 조건부 승인 ('24.9.24.)

자료: European Commission, 언론보도 참고

(3) 수출통제 및 투자제한

□ 폰 데어 라이엔 2기 체제에서 EU 차원의 투자제한·수출통제 입법 및 정책 수립이 본격화될 전망

- 집행위는 경제안보 관련 회원국별 상이한 규범 및 정책 기준을 조화시키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최초의 포괄적 경제안보 전략을 발표('23.6.20.)하고, 그 후속조치로 ▲외국인투자 심사규정 개정안, ▲수출통제 백서⁶¹⁾, ▲해외투자 백서 등 5개 이니셔티브를 제안('24.1.24.)한 바 있음
- 미국과 달리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을 타깃으로 하며, 통신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안보 위협이나 첨단기술 역외 유출, 타국의 일방주의적 수출통제 등으로부터 EU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61) △규정(regulation): EU 법체계상 가장 상위법으로 EU 집행위 제안,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 승인을 통해 채택될 경우 27개 회원국에 동일하게 효력 발생. △권고문(recommendation):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EU법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성격을 지님. △백서(white paper): 구체적인 법 제안 전 회원국, 이해관계자,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안을 담은 문건.

- 다만 회원국들이 중국과의 무역·투자 관계, 과도한 기업 부담, 집행위의 권한 범위 확대⁶²⁾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
 - － 이사회는 의장국인 헝가리의 주도 하에 집행위가 당초 제안한 FDI 심사규정 개정안에서 첨단반도체, AI 등에 대한 필수 심사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중⁶³⁾
 - － 아웃바운드 해외투자 규제안 관련 회원국들은 새로운 보고 의무로 인한 기업 부담을 우려하여 필수적인 데이터만 수집하도록 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청⁶⁴⁾

〈표11. 유럽경제안보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구분	집행위 제안 주요내용	추진 현황
외국인투자 (FDI) 심사규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회원국의 FDI 심사제도 도입 의무화 및 회원국 간 필수 심사 요건 통일 • (심사 대상) AI, 첨단반도체, 양자기술 등 전략적 기술 • (심사범위 확대) 외국인투자자가 제3국 통제를 받거나 EU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개입하는 등 안보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필수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AI, 첨단반도체 등 전략기술을 필수 심사 대상으로 규정한 부속서 내용이 삭제된 수정안 제시⁶⁵⁾ • (의회)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논의가 초기 단계에서 중단되어 제안 검토 및 수정 절차에 뒤늦게 착수⁶⁶⁾ • '25년 최종 합의 예상, 이후 전환기간(15개월) 거쳐 '26~'27년 시행 가능⁶⁷⁾
수출통제 백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품목 확대) 이중용도 품목 규정(2021/821) 개정을 통해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미채택 품목에 대한 EU 차원의 수출통제 적용 * 現 EU 수출통제 체제는 바세나르체제 등 다자체제를 기반으로 하나, 러시아 등 특정 회원국의 반대로 통제 대상 품목 확대 어렵다는 한계. 이로 인해 EU 차원의 조율 없이 개별 회원국의 독자적 수출통제 조치 확대 • (회원국 간 조정 절차) 개별 회원국 수출통제 조치 시행 시 타 회원국에 대한 통보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집행위가 제안한 이중용도 품목 규정 부속서 I 개정은 부적합하다는 의견⁶⁸⁾ • 동 규정 제17조에 근거한 집행위 위임법(Commission Delegated Act)을 통한 신규 통제 품목 추가 가능성 검토 요청⁶⁹⁾ • 회원국 간 조정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나, 동 규정 내 이미 존재하는 조정 메커니즘을 우선 이행할 것을 촉구⁷⁰⁾
아웃바운드 해외투자 백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위, 회원국에 대한 해외투자 모니터링 권고안 발표 예정⁷¹⁾ •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분야 아웃바운드 해외 투자에 대한 회원국 ▲모니터링, ▲위험 식별 및 평가, ▲규제방안 마련을 권고하나 구속력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안에 따라 회원국별 1년간 모니터링 및 위험 평가 실시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체계 구축 (약 1년 반 소요 예정)

자료: 저자 작성

62) 본래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EU집행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안보 이슈에 대한 권한은 회원국 정부에 있어, 경제와 안보의 결합에 따른 권한 조정의 문제 발생. Krupa, Jakub(2024.6.21.), "EU economic security plan bogged down in admin, coordination issues, internal documents show," MLex.

63) Gijs, Camille(2024.11.26.), "EU capitals try to gut investment screening rules aimed at keeping China out," Politico.

64) Sopinska, Joanna(2024.11.14.), "Guidelines to monitor EU outbound investments to be released 'soon'," MLex.

65) Gijs, Camille(2024.11.26.), op.cit.

66) Pandiello, Oscar(2024.10.10.), "EU lawmakers' scrutiny of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revamp to be led by Raphaël Glucksmann," MLex.

67) Ibid.

- 美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수출통제, 투자제한 강화에 대한 추가적 압박 가능성, 미국과의 동맹 약화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최소화하는 기조로의 전환 가능성 등은 또 다른 변수

(4) 중국기업 투자에 ‘기술 이전, 유럽산 사용’ 조건 제시

- 중국 전기차 기업의 EU 역내 그린필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저가 중국 브랜드의 시장 잠식 우려와 전후방 연관 산업에 미치는 생산파급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
 - 미국과 달리 EU는 역내 제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중국의 전기차·배터리 제조 기술 노하우 획득을 목적으로 중국 전기차·배터리 생산업체의 EU 역내 그린필드 투자에 상대적으로 개방적 기조를 취함
 -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집행위의 상계관세 조사 개시('23.10.4.) 이후 중국기업의 EU 역내 투자 관심이 증가했으며, 헝가리, 폴란드, 이탈리아는 각각 중국과 전기차 투자에 대한 개방성을 강조하는 약정 체결⁷²⁾

〈표12. EU 역내 중국 전기차 그린필드 투자 계획 추진 현황('22년 이후)〉

	제조사	지역	보도 시점	현황
1	볼보(Volvo, Geely 자회사)	슬로바키아	'22.7월	확정
2	지리(Geely)	폴란드	'22.10월	미정
3	장성기차(Great Wall Motor)	헝가리	'23.5월	미정
4	BYD	헝가리	'23.12월	확정
5	둥펑(Dongfeng)	이탈리아	'24.4월	미정
6	샤오펑(Xpeng)	유럽	'24.4월	미정
7	BYD (2번째 공장)	유럽	'24.5월	미정
8	니오(Nio)	유럽	'24.5월	미정
9	체리(Chery)	스페인	'24.5월	확정
10	장안(Changan)	유럽	'24.6월	미정
11	상하이차(SAIC, MG 자회사)	스페인	'24.7월	미정

자료: Rhodium Group(2024)

68)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24.5.30), "Council Conclusions on the White Paper on Export Controls".

69) Ibid.

70) Ibid.

71) Sopinska, Joanna(2024.11.14.), op.cit.

72) Sebastian, Gregor and Camille Boullenois(2024.10.1.), "Terms and Conditions Apply: Regulating Chinese EV Manufacturing Investment in Europe," Rhodium Group.

- 그러나 EU 역내 브랜드의 전기차 전환이 부진한 가운데 중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저가의 중국 브랜드 전기차가 EU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심화
 - EU 전기차 시장 내 중국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24.6월 기준 11.1%로, '22년(5.5%) 대비 2배 이상⁷³⁾
- 전기차 생산시설이 관세 회피 목적의 단순 조립 공정 수준으로 EU 역내 공급업체에서 원재료·부품을 조달하는 비중이 낮을 경우, 철강, 자동차부품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제한적
 - 중국 상무부는 자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 최첨단 기술은 중국 내 유지하고, 해외 사업장은 조립에 집중할 것을 권고('24.7월)한 바 있음⁷⁴⁾
 - BYD의 경우 헝가리에 15만 대 이상의 연간 생산능력을 갖춘 2번째 생산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나, 생산 초기에는 중국에서 배터리 셀을 수입할 것이라 밝혔으며, 철강도 중국에서 공급받을 예정⁷⁵⁾
 - 현재 EU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는 1.3%로 미국의 대중국 관세(기본 관세 10.9% 및 301조 관세 25%) 대비 훨씬 낮은 수준⁷⁶⁾이기 때문에 현지 생산 배터리를 사용할 유인이 낮음
- EU는 시장 접근 및 보조금을 대가로 역내산 부품 사용,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함으로써 중국 기업의 역내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중국 당국의 보조금 효과를 상쇄시키는 동시에 EU 이익 극대화 시도 예상
 - EU는 WTO 규칙 준수를 중시를 이유로 미국 IRA와 같이 역내산 조달 요건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지 않지만, 역내산 사용, 기술 이전, 고용 약속 등을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요구하는 모순된 방식을 취하고 있음⁷⁷⁾
 - EU는 12월 공고 예정인 10억 유로 규모의 배터리 개발 보조금 입찰에 EU 역내 공장 설립 및 기술 노하우 공유를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짐⁷⁸⁾

73) Palazzo, Anthony(2024.7.30.), "Chinese EVs Nab Record 11% Share in Europe Ahead of Tariffs," Bloomberg.

74) Lew, Linda(2024.9.12.), "China Asks Its Carmakers to Keep Key EV Technology at Home," Bloomberg.

75) Ibid.

76) Poliscanova, Julia(2024.3.), "To raise or not to raise: How Europe can use tariffs as part of an industrial strategy", Transport & Environment.

77) Sebastian, Gregor and Camille Boullenois(2024.10.1.), op.cit.

78) Hancock, Alice et al(2024.11.19.), "EU to demand technology transfers from Chinese companies," Financial Times.

〈표13. 중국 전기차 투자에 대한 EU의 대응 가능 조치〉

조치	상세 내용	전망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산 부품(local content) 사용 요건 부과 • 노하우 및 기술 이전 요구 	이미 활용 중이며, 추후 더 확대될 가능성
상계관세 조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특정 전기차 부품까지 확대 	전기차 조사로 촉발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확대될 수 있음
우회수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저부가가치 조립 공정만 운영할 경우 수입 부품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 개시 가능 • EU 규정상 완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총가치 중 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부터 유입된 부품의 가치가 60% 이상인 경우 우회에 해당 	부가가치 비중 계산 등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실현될 가능성은 낮음
GDPR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R가 차량이 수집하는 위치정보 등 데이터까지 포괄하도록 범위 확대 	역내 데이터 저장 서버 설치 투자 유도 가능
커넥티드카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사이버안보 및 데이터 관리 요건 강화 	도입된 가능성 높으나 비중국산까지 영향 가능

자료: Rhodium Group(2024) 참고하여 저자 작성

- EU 고위 관계자들은 이러한 보조금 입찰 조건이 다른 보조금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⁷⁹⁾
- 이탈리아는 중국 국영기업인 동평과의 협상에서 부품의 최소 45% 현지 조달, 고객 데이터 국외 이전 불가, 인포테인먼트 장치 등 핵심 부품 역내 조달 등을 조건으로 요구⁸⁰⁾
-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거래 금지 규제와 마찬가지로, 커넥티드 차량 기술에 대한 규제를 통해 중국 제조업체가 부품이나 데이터를 현지화하도록 할 가능성⁸¹⁾
- 일반데이터보호규칙(GDPR)의 적용범위를 위치 데이터 등까지 확대하여 현지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EU나 회원국 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현지 ICT 공급업체와 거래하도록 할 가능성⁸²⁾

79) Hancock, Alice et al(2024.11.19.), “EU to demand technology transfers from Chinese companies,” Financial Times.

80) Ibid.

81) Sebastian, Gregor and Camille Boullenois(2024.10.1.), op.c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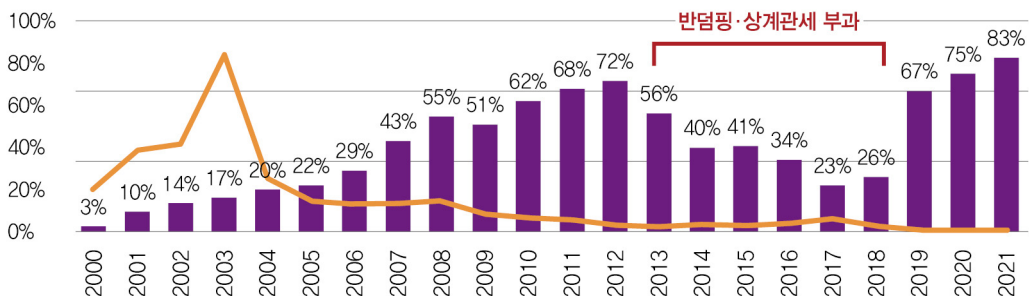
82) Ibid.

3 전망 및 시사점

(1) EU의 대중국 경제안보 정책과 영향

- EU는 美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보복관세 등 맞대응에 나서기 전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대중국 경제안보 공동 조치 등의 ‘당근’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음
 -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제안했다고 밝혔으며(‘24.11.9.), 그 밖에 농산물, 무기 구매 확대 및 미국 기업들의 역내 군수품 조달 참여 허용 등 방안을 검토 중⁸³⁾
 - 우호적 대미 관계 유지를 위해 대중국 관세 부과, 수출통제, 투자제한 등 공동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음
 - 미국이 독자적으로 수출통제, 투자제한 등 조치를 강화할 경우 제재 효과가 떨어지고 타국 경쟁업체에 비해 미국 기업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대중국 제재 동참 압박을 높일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대중국 고율관세로 인해 저가 중국산 제품의 EU 역내 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집행위의 대중국 경제안보 정책 추진 속도에 영향
- 강화되는 대중국 경제안보 조치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EU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
 -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확정, 역외보조금규정에 근거한 중국 기업 기습 압수수색 등 조치를 시작으로 다수의 반덤핑·상계관세, 중국산 풍력터빈에 대한 역외보조금 조사 등에 박차를 가할 전망
 - 중국을 겨냥한 반덤핑·상계관세, 역외보조금 규제 등은 중국 기업의 EU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음
 -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13~’18년) 당시 중국산 수입 비중은 ’12년 72%에서 ’17년 23% 수준으로 급감한 바 있음

〈그림9. EU 대중국 태양광 패널 수입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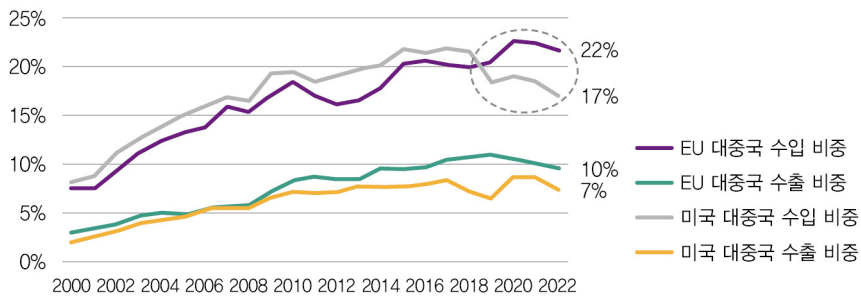


자료: Frank Vandermeeren(2024)

83) Khalaf, Roula(2024.11.28.), "Buy American to avoid Trump trade war, says Christine Lagarde," Financial Times.

- BYD 등 중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는 EU의 상계관세 부과에도 가격경쟁력 우위에 있으나, 수익 저하를 우려하여 단기적으로는 타 지역으로 수출을 선회할 수 있음⁸⁴⁾
- 다만 EU의 대중국 무역·투자 의존도는 여전히 높아 미국과 같은 높은 관세조치나 규제 가능성은 낮음
- 트럼프 1기 행정부('17~'20년)부터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축소 중인 미국에 비해 EU는 여전히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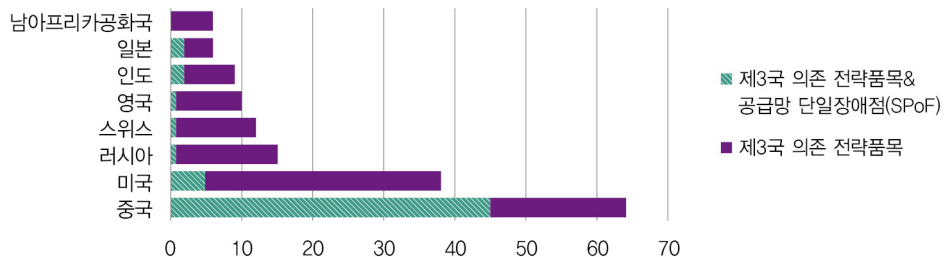
〈그림10. 美·EU 대중국 무역 의존도 추이〉



자료: Frank Vandermeeren(2024)

- EU의 제3국 의존도가 높은 전략품목 204개 중 64개(약 31%)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2/3 이상은 중국이 단일 공급원으로 수출통제 등 조치에 취약

〈그림11. EU 국가별 의존도 높은 전략품목 현황〉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4)

주: 단일장애폭(Single Point of Failure)는 단일 국가, 또는 공급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해당 공급선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체 공급망이 중단될 수 있는 지점을 의미

84) Oertel, Janka(2024.10.24.), "From Brussels with leverage: How the EU is recalibrating its China strategy,"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독일, 헝가리 등 EU 회원국들은 중국의 투자 유치에 따른 경제 효과, 중국 시장 내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대중국 관세 부과, FDI 심사 규정 완화 등 집행위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에 반대 입장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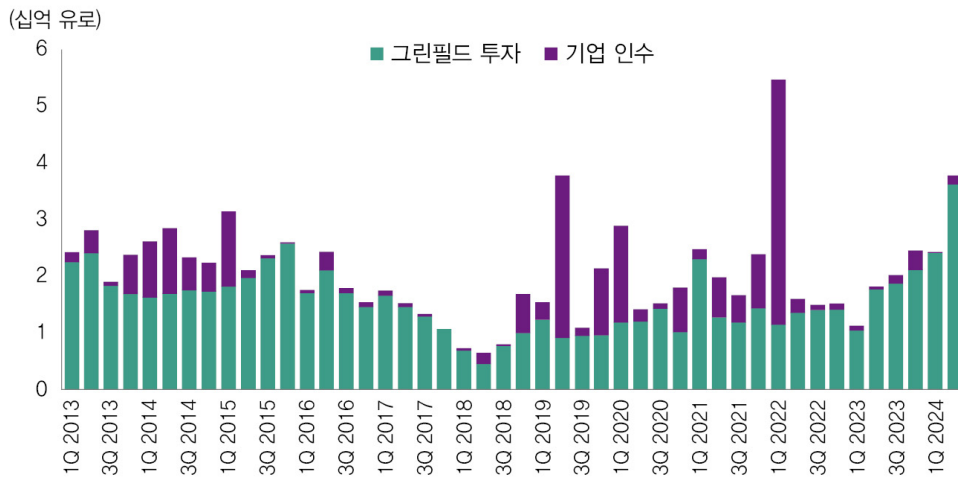
– 헝가리는 '23년 기준 중국의 對EU FDI 중 44.1%⁸⁵⁾를 유치했으며, 독일은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EU의 대중국 FDI의 절반 이상을 차지⁸⁶⁾하며 오히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음

□ 중국산 제품 수입이나 중국의 EU 역내 직접투자 유입을 막기는 어려워 EU 역내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지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반사이익 기대는 어려운 상황

- 특히 전기차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對EU 그린필드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EU 시장 내 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중국의 對EU 그린필드 투자는 '24.2분기 36억 유로를 기록⁸⁷⁾해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23년 기준 전기차 관련 투자가 전체 중국 FDI의 약 70%를 차지

〈그림12. 중국의 對EU FDI 유형별 추이〉



자료: Rhodium Group(2024)

85) Kratz, Agatha et al(2024.6.6.), "Chinese FDI in Europe: 2023 Update," Rhodium Group.

86) EU의 대중국 FDI 중 독일 비중은 '22년 71%, '23년 62%, '24년 상반기 57%를 차지. Kratz, Agatha et al(2024.10.31.), "Don't Stop Believin': The Inexorable Rise of German FDI in China," Rhodium Group.

87) 최근 2년간 가치가 공개되지 않은 약 80건의 투자는 추정치에서 제외되었고, 중국 내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정치권, 언론의 감시가 강화되어 비공개된 거래가 있을 수 있고, 100만 유로 이상의 대규모 거래에 초점을 두어 중소기업 투자가 누락되었을 수 있어 동 수치는 과소 상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Ibid.

- 한국산 예폭시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사례와 같이 중국 공급과잉으로 피해를 입은 EU 현지 기업이 중국 뿐 아니라 우리 기업도 함께 제소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대중국 수입규제 강화로 인해 중국산 수입이 감소하고 한국산 제품이 이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우리 기업도 새로운 수입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역외보조금규정도 중국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EU 역내 합작법인 설립이나 일정 가액 이상의 공공조달 참여 계획이 있는 경우 한국을 포함한 EU 역외국 정부들로부터 받은 보조금 여부를 검토할 필요

(2) EU의 친환경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과 영향

- 美 트럼프 당선인의 기후정책 퇴보 가능성에도 EU는 친환경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규제보다는 투자 확대에 접근할 예정이며, 탄소중립 전환 속도가 둔화될 수 있음
 -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실사지침 등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과 동시에 환경 기준이 낮은 역외국 기업에도 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어 철회 가능성은 낮음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러시아산 화석에너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불가피
 - EU는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미국의 친환경 정책이 퇴보하는 동안 친환경 기술·인프라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친환경 산업 주도권의 재탈환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 이미 법제화된 친환경 정책의 철회는 어려우나 시행이 연기되거나 미국 등 타국과의 규제 격차를 고려해 이행·위임입법 단계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변화는 발생 가능함
 - 친환경 분야 투자 확대 및 규제 완화는 EU에서 대규모 공장 신·증설을 진행 중인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 및 친환경 인프라·기술 분야 기업에게 기회 요인
- 미국 주도의 리쇼어링 정책 확산에 따라 친환경 산업 투자에 대한 유인책뿐만 아니라 역내 제조업 역량을 보호, 강화하고자 하는 보호주의 조치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
 - 제조업 투자 시 역내 전후방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친환경 기준을 내세운 역내산 원재료·부품 조달 요건 도입 가능성

- 이미 정치권에서 EU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을 목적으로 논의 중인 친환경 철강 사용 요건 등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EU 현지에 진출한 자동차 등 우리 제조기업에 부담 증가 우려
 - 공공조달지침 개정 시 공공조달 평가에 대한 비(非)가격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EU 역내 기업을 우대하고 역외기업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지속 모니터링 필요
- 공급망실사지침 등 규제 대응 시 향후 보고 의무가 완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규정에 따른 의무 자체가 축소·철회될 가능성은 낮음
- 공급망실사지침 등 규제는 향후 시행 단계에서 다른 규범과 중복되는 요건이 삭제·통합되고, 디지털화를 통해 기업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 부담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상당함
 - 다만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 자체의 축소·철회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삼림벌채금지규정(EUDR) 사례에서와 같이 이미 규정 준수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의 반발⁸⁸⁾이 제기될 수 있어 가능성이 낮음

88) Arboleas, Maria Simon and Sofia Sanchez Manzanaro(2024.11.14.), "EUDR: Parliament backs 'no risk' group, trade partners accuse EU of protectionism," Euractiv.

[표]

1. 폰 데어 라이엔 1기 통상정책 및 주요 입법 (p.1)
2. 제10대 유럽의회(2024~2029) 의석수 (p.3)
3. 미국, EU, 중국 산업정책 현황 (p.5)
4.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른 EU 철강·태양광 산업 영향 (p.5)
5. 통상 관련 집행위원 정보 (p.8)
6. 청정산업딜 주요 내용 (p.10)
7. 친환경 철강 최소사용요건 관련 의견 대립 (p.12)
8. 드라기 경쟁력 보고서 주요 내용 (p.13)
9. '24년 EU 대세계 수입규제 신규조사 개시 현황 (p.17)
10. FSR에 의거한 중국기업 조사 개시 사례 (p.20)
11. 유럽경제안보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p.21)
12. EU 역내 중국 전기차 그린필드 투자 계획 추진 현황('22년 이후) (p.22)
13. 중국 전기차 투자에 대한 EU의 대응 가능 조치 (p.24)

[그림]

1. EU·美·中 PPP 기준 GDP 추이 (p.2)
2. 美-EU 근무시간당 생산량 추이 (p.2)
3. 美-EU 산업용 에너지 가격 추이 (p.3)
4. 유럽의회 그룹별 의석수 변화(2014~2024년) (p.4)
5. 폰 데어 라이엔 2기 통상정책 변화 (p.7)
6. 폰 데어 라이엔 2기 집행위원단 주요 인선 (p.8)
7. 그린딜 발전 추이 (p.10)
8. EU의 對세계 수입규제 신규조사 개시 건수 추이 (p.17)
9. EU 대중국 태양광 패널 수입 비중 추이 (p.25)
10. 美·EU 대중국 무역 의존도 추이 (p.26)
11. EU 국가별 의존도 높은 전략품목 현황 (p.26)
12. 중국의 對EU FDI 유형별 추이 (p.27)

[참고]

1. 역외보조금규정 주요 내용 (p.19)

참고자료

[국내 문헌 · 기사]

법무법인 대륙아주(2024.8.26.), “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 현황, 사례 및 시사점,” 법률신문.

안중기(2024.4.), “주요국의 전략산업 재정지원 정책 현황,” FIS 재정리포트 24-03, 한국재정정보원.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024.10.16.), “EU 집행위원단 선출 결과 및 차기 집행위 정책 전망,” EU통상정보.

장영욱 외(2024.8.26.), “2024~29 EU 집행위원회 정책 의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7 No. 3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해외 문헌 · 기사]

Alan Beattie(2024.5.9.), “Europe’s new anti-subsidy weapon is powerful but hard to control,” Financial Times.

Draghi, M.(2024),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A Competitiveness Strategy for Europe”

Delphine Strauss, Sam Fleming and Valentina Romei(2024.3.10.), “Europe faces ‘competitiveness crisis’ as US widens productivity gap,” Financial Times.

Eurofer(2024.9.5.), “European steel industry and manufacturing at existential risk: radical Clean Industrial Deal last train for stronger and greener EU, warns EUROFER”.

Faggionato, Giovanna(2024.11.12.), “5 things to know about EU industry chief Stéphane Séjourné’s hearing,” Politico.

Foy, Henry et al(2024.4.24.), “EU conducts ‘dawn raid’ on Chinese security equipment supplier,” Financial Times.

Vandermeeren, Frank(2024.1.17.), “Understanding EU-China exposure,” Single Market Economics Papers.

Gijs, Camille(2024.11.26.), “EU capitals try to gut investment screening rules aimed at keeping China out,” Politico.

Gijs, Camille(2024.9.17.), "Von der Leyen's Mr. Fix It handed his toughest mission yet," Politico Pro.

Gros, Marianne(2024.11.25.), "Brussels to slash green laws in bid to save Europe's ailing economy," Politico.

Guillot, Louise(2024.11.29.), "EPP abandons push to weaken anti-deforestation rules," Politico Pro.

Hancock, Alice et al(2024.11.19.), "EU to demand technology transfers from Chinese companies," Financial Times.

Homan, Zoe (2024.2.1.), "Cuts on new EU funding for strategic technology platform confirmed by European leaders," MLex.

IEA (2024), "Advancing 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 IEA.

IndustriAll and Eurofer, "A EUROPEAN STEEL ACTION PLAN".

KAWANO, MAO(2024.6.1.), "China solar panel glut squeezes European suppliers as prices plunge," Nikkei Asia.

Khalaf, Roula(2024.11.28.), "Buy American to avoid Trump trade war, says Christine Lagarde," Financial Times.

Kratz, Agatha et al(2024.6.6.), "Chinese FDI in Europe: 2023 Update," Rhodium Group.

Kratz, Agatha et al(2024.10.31.), "Don't Stop Believin': The Inexorable Rise of German FDI in China," Rhodium Group.

Krupa, Jakub(2024.6.21.), "EU economic security plan bogged down in admin, coordination issues, internal documents show," MLex.

Lew, Linda(2024.9.12.), "China Asks Its Carmakers to Keep Key EV Technology at Home," Bloomberg.

Maria Simon Arboleas and Sofia Sanchez Manzanaro(2024.11.14.), "EUDR: Parliament backs 'no risk' group, trade partners accuse EU of protectionism," Euractiv.

Martuscelli, Carlo(2024.10.3.), "7 ways the US is beating Europe," Politico.

Naschert, Camilla(2024.4.15.), "Squeeze on European solar manufacturers curbs innovation, cementing China's lead," S&P Global.

Oertel, Janka(2024.10.24.), "From Brussels with leverage: How the EU is recalibrating its China strategy,"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Packroff, Jonathan(2024.9.6.), "Car industry pours cold water on von der Leyen's 'lead markets' plans," Euractiv.
- Packroff, Jonathan(2024.8.30.), "Steelmakers want von der Leyen to force public authorities, industry to buy green steel," Euractiv.
- Palazzo, Anthony(2024.7.30.), "Chinese EVs Nab Record 11% Share in Europe Ahead of Tariffs," Bloomberg.
- Palmer, Doug and Camille Gijs(2024.11.14.), "EU warned to prepare for early Trump tariff action," Politico Pro.
- Pandiello, Oscar(2024.10.10.), "EU lawmakers' scrutiny of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revamp to be led by Raphaël Glucksmann," MLex.
- Poliscanova, Julia(2024.3.), "To raise or not to raise: How Europe can use tariffs as part of an industrial strategy", Transport & Environment.
- Porciello, Stefano(2024.7.23.), "Comment: New EU 'Clean Industrial Deal' proposals are heavy on recycling ... of old ideas," MLex.
- Porciello, Stefano(2024.11.4.), "EU should 'stick to the plan' on CO2 goals for cars, transport chief candidate says," MLex
- Porciello, Stefano(2024.11.21.), "Polluting EU automakers should not be fined next year, center-right EPP set to say," MLex.
- Porciello, Stefano and Matthew Newman(2023.6.22.), Comment: Europe's answer to US Inflation Reduction Act risks never happening," MLex
- Sebastian, Gregor and Camille Boullenois(2024.10.1.), "Terms and Conditions Apply: Regulating Chinese EV Manufacturing Investment in Europe," Rhodium Group.
- Spiegelman, Margaret(2024.11.13.), "EU industrial strategy nominee pledges push to protect steel sector," Inside U.S. Trade.
- Sopinska, Joanna(2024.11.14.), "Guidelines to monitor EU outbound investments to be released 'soon'," MLex.
- Strauss, Delphine et al(2024.3.10.), "Europe faces 'competitiveness crisis' as US widens productivity gap," Financial Times.

Transport & Environment(2024.7.), "Cleaning up steel in cars: why and how?".

Verhelst, Koen and Camille Gijss(2024.11.4.), "5 takeaways from Maroš Šefčovič's trade czar confirmation hearing," Politico.

[법안 및 정부 관련 문서]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24.5.30), "Council Conclusions on the White Paper on Export Controls".

European Commission(2024.9.24.), "42nd Annual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EU's Anti-Dumping, Anti-Subsidy and Safeguard activities and the Use of Trade Defence Instruments by Third Countries targeting the EU in 2023".

European Commission(2023.3.16.), "Long-term competitiveness of the EU: looking beyond 2030,"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European Commission(2024.11.8.), "Opening remarks by President von der Leyen at the joint press conference with President Michel and Hungarian Prime Minister Orbán following the informal meeting of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of 8 November 2024".

European Council(2024.11.8.), "Budapest Declaration on the New European Competitiveness Deal".

European Parliament(2024.11.8.), "European Steel Action Plan – Letter for Urgent Action".

Ursula von der Leyen(2024),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2024–2029".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4.11.5.), "U.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September 2024".

〈2024년 KITA 통상리포트 발간 목록〉

No.	제목	작성자	발간일자
13	폰 데어 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 심화되는 美·中 경쟁 속 생존 전략	한아름	24.12.18
12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통상연구실	24.11.07
11	주요국의 제약·바이오의약품 산업 공급망 재편 정책 및 시사점	한주희	24.11.01
10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이유진/한아름	24.09.11
9	한-UAE CEPA 주요 내용 및 우리 수출기업 인식 조사	강금윤/오지인	24.09.03
8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이정아/강금윤/오지인	24.08.22
7	인공지능(AI) 규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및 시사점	정해영	24.07.26
6	미-중 전략경쟁, 레거시 반도체로 전이되나? - 주요국의 레거시 반도체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이유진	24.07.12
5	美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한아름	24.06.10
4	한국의 FTA 체결현황 점검	통상연구실	24.05.24
3	미국의 경제안보·핵심기술 통제 전략 강화 및 시사점	정해영/이정아/한주희/고성은	24.02.27
2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강금윤	24.02.20
1	글로벌 공급망에 커진 또 다른 경고등 - 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	한아름	24.02.08



TRADE REPORT

202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7층
2024. 12. 18